

대한민국 2015 년 인권보고서

개요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2012 년 총선과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 것으로 간주된다. 문민 당국은 보안 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중요한 인권 문제들로서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 등의 관련 법률들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와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 외의 인권 문제들로서 일부 공직자의 부패,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률의 부재,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 인신 매매 등이 있었다. 탈북자, 소수 민족/인종,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간성(LGBTI), 에이즈 환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에 제약을 가한 것도 문제였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면책이 허용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제 1 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서울서부지법은 상관을 빼고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부하 경관을 사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부는 당해 연도 상반기에 군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수가 24 명으로 전년 동기의 37 명에 비해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다. 군대 내 자살의 주된 원인은 괴롭힘, 가혹행위, 군대 부적응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인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목적으로 2014 년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9 월에 국방부는 군대 내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한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당해 연도 말 현재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8 월에 국방부 군사고등법원은 괴롭힘과 따돌림을 이유로 동료 병사 5 명을 살해하고 7 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자살을 시도하여 사형을 선고받은 병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군대 내 가혹행위를 금지할 목적으로 군인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2015 년 8 월까지 340 명의 인권교관을 양성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군 인권개선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입각하여 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b. 실종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정부 당직자가 당해 연도 중에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믿을만한 보고가 있었다.

국방부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300 건의 형사 사건이 보고된 2014 년과는 대조적으로 6 월 30 일 현재 군대 내 가혹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으나 일반 국민들은 가혹행위가 군대 내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위 내용 참조). 이처럼 군대 내 가혹행위가 감소하고 외견상으로는 근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에 따르면 병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가혹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은 판사 혹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19 세 미만 아동을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

교도소 및 구치소 환경은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했다.

시설 현황: 교도소 내 사망자들의 사망률/사망원인은 국가 평균과 전반적으로 합치했다.

행정: 관계 당국은 문제가 있는 상황들에 관한 신빙성을 갖춘 주장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문서화했다.

독립적인 감시: 교도소 시설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구금 실태에 대한 감시를 요청하지 않았다.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된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5월에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국가 전복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 및 보안기관의 역할

경찰청은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치안을 담당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법무부의 감독하에 출입국 및 국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문민 정부는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과 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국가정보원(NIS)은 국가 안보 및 체제 전복과 관련된 범죄나 범행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의 포괄적인 권한과 비밀주의가 부실한 감독 체계와 맞물리면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불합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당해 연도 중에 보안 기관이 관련된 면책 조치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시물을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여 2월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7월에 대법원은 유죄 확정의 근거가 된 일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현행범인 경우, 또는 영장 발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국은 자진 출두한 자를 경찰서에서 6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당국은 구속 후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금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보석 제도가 있다.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당국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도주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재판 기간 중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판 전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간 중 가족 면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자의적 체포: 법무부는 2014 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 명이 구속됐다고 보고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9 월 현재 전년도 구속자들을 포함하여 총 32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9 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 세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학생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사면: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 주년을 기념하여 8 월 13 일에 6,527 명에게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과거의 경우와는 달리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재판 절차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은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필요한 경우 통역을 이용하고 구속 이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변호사 접견권(필요한 경우 국비 지원),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항소권 등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소급 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보장되나 검찰은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피의자는 구속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1 심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판사는 본인과 협의의 통해 도출된 법적 효력을 갖는 배심원 평결에 동의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은 반드시 피고의 사전 신청을 필요로 한다.

판사는 검찰과 피고 양측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라고 진술하거나 자백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증거에 접근할 수 있다.

정치범

법무부는 현재 단지 정치적인 신념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양심적 병역거부, 정의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시민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에 따라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는 법률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 병역 의무 위반자 혹은 거부자는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국방부는 건강이나 장애 혹은 기타 사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9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635명이 수감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인 워치타워는 8월 현재 여호와의 증인 신자 555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상태라고 밝혔다.

민사 사법 절차 및 구제 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 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 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은 법원에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잘못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 침해

위와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도청방지법은 정부가 범죄수사의 경우 최장 2개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개월간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개월 간격으로 주요활동사항, 인적 사항, 직업, 재산 상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보법은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 또는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본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여전히 드물고, 가정에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7 월에는 국가정보원에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외국 해킹업체인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어 국정원이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IP 주소들이 수록된 리스트가 공개됐으며 여기에는 KT,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 다음카카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7 월 말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이 외견상 자살로 추정되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이 국정원의 공작 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자료를 삭제했으며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이 프로그램의 대상 목표는 북한이었으며 내국인 사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제 2 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표현 및 언론의 자유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헌법 제 21 조 제 4 항,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가했다.

표현의 자유: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입각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도 북한을 고무 혹은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정치인을 비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당국에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장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의 2014/15 년도 보고서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시민을 위협하고 수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기술했다.

1 월에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행했다는 이유로 재미교포인 신은미 씨에게 강제출국 명령을 내리고 5 년간 입국을 금지했다. 당국은 신은미 씨의 방한을 기획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행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체포하여 기소했다.

언론의 자유: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지만 엄격한 명예훼손 법률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제한됐다.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익에

부합하고 사실을 적시한 표현을 겨냥한 명예훼손 소송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처벌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12월 17일에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타츠야 전 서울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0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4월에 정부는 가토 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일본으로의 귀국을 허용했다. 그 이후로 가토 지국장은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검열 혹은 내용 제한: 여성가족부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심의할 수 있으며 유해하다고 판정된 경우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는 방송과 인터넷 통신의 윤리 규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010년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통위가 정부나 거대 기업에 비판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0월에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정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2010년 이후로 일선 학교가 교육부의 검정승인을 거친 수종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자율권이 사라진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명예훼손죄/모욕죄: 명예훼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률이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거나 검열할 목적으로 정부와 개인(과거의 경우)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다.

국가안보: 국가보안법은 복한을 지지하거나 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을 체포하고 수감하거나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정당을 해산하는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5월에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했으며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권한을 근거로 e 메일과 인터넷 대화방을 감시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널리 보급되어 있다.

방통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게시판 같은 SNS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불법·유해 정보로 규정된 콘텐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금지된 게시물이 발견된 경우

정부는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금지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계정이 차단된다. 그에 추가하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인터넷상에서 허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발견되는 즉시 삭제 조치했다.

정부는 또한 폭력 사이트, 외설 사이트, 도박 사이트, 기타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기·식품·의약품 불법 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자살 모의·조장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와 북한 유튜브 채널 및 트위터 계정으로의 직접 접근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지만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러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국보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된다.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 방통위는 북한 사이버 공작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차단했다. 국방부는 당해 연도 중에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적발하여 삭제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했으며 시민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주의서를 전달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과 언론이 ‘부분적으로 자유롭다’고 평가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정부가 학문의 자유나 문화 행사를 구체적인 표적으로 삼아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일선 중·고등학교가 역사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2.a ‘검열 혹은 내용 제한’ 참조).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 법에 입각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시위를 금지했다. 경찰청은 9월까지

접수된 1 만 건 이상의 집회 신청 가운데 94 건을 불허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형법 제 314 조 업무방해죄 역시 평화로운 집회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68,000 여명이 참가하여 2008 년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기록된 11 월 집회를 포함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군중을 해산할 목적으로 물대포와 최루탄을 사용했다. 일선 경찰 병력은 청와대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 차단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수십 명의 시민이 체포됐으며 최소 30 명 이상의 시민과 경찰 113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참조.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무국적자

국내 이동의 자유, 국외 여행(북한 제외), 이민, 송환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실향민, 난민, 복귀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국외 여행: 방북을 원하는 모든 시민은 사전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북 희망자는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한국 정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외교부는 2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자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난민 보호

망명에 대한 접근성: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별도의 법률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난민 또는 망명 통계에 탈북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률에 의해 한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탈북자 혹은 해외 난민을

수용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했다. 정부는 10월까지 약 978 명의 국내 재정착을 지원했으며 이는 2003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였다.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탈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일상적으로 망명을 허용하거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입국 시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강제 송환이 금지된다. 난민신청자는 정부를 상대로 통역과 법률적 조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을 허가받을 수 있다.

난민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9월에 소집된 청문회에서 1월 이래로 2,669 명이 한국 망명을 신청했지만 그 중 24명(0.9 퍼센트)만이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1994년 이래로 13,310 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한국 정부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한 비율은 시리아인 2명을 포함하여 4 퍼센트(526명)를 밀돌았다. 법무부는 신청자 가운데 5,467 명이 난민 지위 혹은 인도적 체류 허가에 요구되는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당수 신청자가 필수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난민 지위에 요구되는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중 1,679 명은 최종 난민 지위 심사에 앞서 신청을 철회했다.

강제송환: 망명 희망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출입국항에서 ‘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가 망명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정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규정된 농르플망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탈북자들은 문화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는 사회적 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2014년에 탈북자 200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당수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2 등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까지 고용 차별과 여권 발급 거부를 포함하여 탈북자와 관련된 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항구적 해결책: 법무부는 2017년까지 버마 카렌족 난민 30 명의 영구적인 재정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9월에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정부가 외국 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업이었다. 1차로 버마 난민 23 명이 12월에 입국했다.

임시 보호: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량 난민이 발생한 경우 임시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난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취급 혹은 형벌로 인해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자에게는 ‘인도적 체류 난민

지위'에 근거한 대체 보호 수단으로서 갱신이 가능한 단기 체류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1994년 이후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13,310명 가운데 889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부여됐으며 그 중에는 최근에 등장한 시리아 난민 600여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말을 기준으로 신청자 4,750여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관련 규정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 지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난민과에 따르면 2013년에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로 난민 신청이 300퍼센트 가까이 급증한 까닭에 신청 처리에 평균 18개월이 소요되고 있었다. 정부는 난민 신청이나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80명의 망명 희망자가 최장 9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출입국지원센터를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정부는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통상적인 난민 지위 판정 절차를 생략하고 시리아 국적자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1월 현재 약 650명의 시리아 국적자가 망명을 신청했으며 그 중 500명 이상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가 인정됐다.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은 7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시리아 국적자가 차지했다. 그 외에도 팔레스타인, 이집트, 중국 그리고 일부 버마 난민이 포함됐다.

무국적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20만 명의 불법 체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2만여 명의 무국적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 체류 노동자는 본국 송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관공서나 자국 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 3 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법률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은 이 능력을 행사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 및 총선은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불법 선거 개입 사례가 있었다(1.d '경찰 및 보안기관의 역할' 참조).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에 위헌 판결이 났지만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선거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실명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 참여: 2014 년 12 월에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친북 성향을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1948 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사법부나 행정부의 명령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또한,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기소했다. 1 월에 대법원은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은 공직선거 출마와 선거권이 제한됐다.

제 4 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부족

공직자 부정을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일부 공직자의 뇌물 수수 및 정치 개입 사례가 보고되었다.

부패: 법무부는 2014 년 뇌물 수수 건수가 2013 년과 비교하여 26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당해 연도 중에 여야 국회의원 3 명이 뇌물 수수로 유죄가 확정됐으며 다른 1 명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4 월에는 정부가 지원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에 관한 조사를 받던 성완중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이 이완구 전 총리를 포함하여 수인의 정치인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4 월 말에 총리직을 사퇴했으며 7 월에 검찰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기소했다.

재산 공개: 선출직을 포함하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8,477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 한국에는 정보공개법이 존재하며 동법은 효과적으로 시행됐다.

제 5 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단체의 의견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 인권기구: 인권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으며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일선 공직자들을 교육하고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하며 북한 문제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 월 31 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5,041 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4,886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국가보안법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된 사건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옴부즈맨 업무는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와대, 국회, 각부 부처 등 각급 정부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 권익위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진정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 6 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법률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이행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HIV 차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법률은 강간과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된 사건에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제도는 효과적으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배우자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지만, 대법원은 2013 년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강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하 3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강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례들도 있었다.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이 가해자를 상대로 최장 6 개월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명령은 최장 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 만원(약 6,7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보호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19,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 관찰에 처하거나 법원이 지정하는 상담사에게 상담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고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은 직권에 의해,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명령에 의해 가해자에게 주거 퇴거 혹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통신 장비를 통해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부부의 수는 약 151,000 쌍이었으며 그 가운데 85 퍼센트는 여성이 외국인이었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체 외국인 이주 여성의 약 70 퍼센트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한 콜센터는 112,000 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전체 신고 전화의 11 퍼센트는 가정폭력, 5 퍼센트는 보호시설 입소 지원요청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해 연도 중에 정부는 성폭력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군인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6 월을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했다. 일선 초·중·고와 중앙 및 지방 관공서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센터에 재원을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지원, 사건 조사,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전국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담센터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상담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지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상당수 시설은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과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를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도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10 세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핫라인 상담전화를 신설했다. 정부는 상담, 취업,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지원하고 있었다.

성희롱: 관련 법률은 회사와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고,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7. d 참조). 경찰청은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4 년에 14,611 건이 신고됐다고 보고했다.

성희롱 주장이 제기된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공공기관인 경우 행정 처분도 가능하다.

출산권: 법률은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 그리고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들의 생식 건강을 관리하며 그러한 결정을 차별과 강압, 폭력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숙련된 분만 보조 인력, 낙태로 인한 합병증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응급 의료 체계, 출산 전 산모 보호, 필수적인 출산·산후 보호 등 피임과 모성 보건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차별: 여성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OECD 에 의하면 2014 년도의 경우 한국의 남녀간 급여 차이는 36.6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d 참조). 가족법은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여성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여성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민간·비영리 부문의 여성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3 년에 여성 인재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14,145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

출생신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관계 당국은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태아가 무국적자인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구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법률은 모든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생 후 1 주일 이내에는 입양을 금하고 있다.

아동 학대: 법률은 아동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금지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014 년도의 경우 아동 학대 사건이 2013 년도와 비교하여 47.5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51 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36 개 아동 학대 보호시설 가운데 7 곳에서 피해 아동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정부는 아동 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24 시간 운영되는 온라인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조혼 및 강제결혼: 법률상의 혼인 가능 연령은 남녀 모두 최소 18 세다.

아동 성착취: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13 세다. 19 세 미만의 청소년과 위계·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십대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13 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10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13~19 세 미성년자 강간범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에 추가하여,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금지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2 천만원(19,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아동유괴: 한국은 ‘1980년 국제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당사국이다. 이에 관한 사항은 협약 준수 현황에 관한 국무부 보고서(travel.state.gov/content/childabduction/en/legal/compliance.html)와 국가별 정보(travel.state.gov/content/childabduction/en/country/south-korea.html)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소수의 유태계 인구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7월에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 홈페이지에 외국계 헷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경영진을 겨냥하여 반유대적인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글과 만평이 게재됐다.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그룹 지주회사인 제일기획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한 바 있었다. 삼성물산은 해외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만평에 항의하고 반유대주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인신매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장애인

법률은 고용, 교육, 비행기 여행 및 기타 교통수단, 건강권, 기타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신체, 감각, 발달,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2014년에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법률에 의해 장애인을 전담하는 검·경 특별 태스크포스가 설치되고 장애인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한 건물,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사업을 시행했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법률은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28,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포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의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의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기회와 접근권을 확대할 목적으로 국립재활원뿐만 아니라 6개 지역에 재활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1,097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접수됐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였다.

3월에 정부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서해안 섬 일대의 염전을 대상으로 옥설과 신체적 가혹행위,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비위생적인 노동 및 거주 환경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을 수사했다. 9월에 광주고등법원은 염전 소유주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신매매범 중 한 명은 18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이 유예됐다(7.d 참조).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들은 당해 연도 중에 집중적인 수사가 실시되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대상자로 등록된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저소득 가구 경증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며 지자체는 수급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연금을 직접 지급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제도가 가족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지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며 3~17세 아동을 위한 공립특수학교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중증 장애 아동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공·사립 학교, 어린이집, 교육시설, 교육기관은 장애 아동을 위한 설비와 기타 자원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일례로, 일선 학교들은 장애 아동의 야외 활동을 돕는 보조교사를 배치했다.

소수 국민/인종/민족

국민 대부분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인구 5천만의 한국에는 9월을 기준으로 174만명(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소수 민족/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상적으로 행해지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7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1건의 민족 및 인종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수 민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인한 폭력 행위, 차별, 기타 가혹행위

법무부는 헌법의 평등 원칙이 LGBTI 에게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LGBTI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거나 차별 혹은 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반기에 그러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이 4 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4 월에 법무부와 서울시청은 LGBTI 지원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신청 법인의 활동 범위가 소수자 집단에만 국한되므로 법인 설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 6 월에 열린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금지한 서울경찰청의 처분을 정지시켰으며 이 행사는 삼엄한 경비 아래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됐다. LGBTI 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은 퍼레이드 행사장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해 연도 중에 LGBTI 를 상대로 행해진 폭력 사건은 알려진 바 없지만 LGBTI 당사자나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당했다. 군 형법은 군대 내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LGBTI 단체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극소수 연예인들은 그로 인해 각종 연예 관련 단체에서 해고를 당했다.

HIV 및 에이즈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일각에서는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연예, 스포츠 혹은 기타 쇼 산업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90 일 이상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E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HIV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E 비자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 의무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HIV 검사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5월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울산교육청이 2009년에 외국인 여교사에게 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HIV/AIDS 및 약물 검사를 요구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CERD 위원들은 울산교육청이 내국인 교사에게는 검사를 면제하면서도 외국인 영어 교사에게만 의무적으로 검사를 요구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CERD는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울산교육청 관계자가 HIV/AIDS 검사는 외국인 영어 교사의 도덕성과 가치관을 점검하는 수단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CERD는 검사 정책이 “공중 보건 혹은 다른 어떠한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CERD는 한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 교사에게 도덕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CERD는 당국이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검토하고 인종 차별을 초래하거나 영속화하는 일체의 규정을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제 7 절. 근로자의 권리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법률은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합법적인 쟁의권,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를 포함하여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법률에 의해 공무원은 “노동 운동 목적의 집단 행동”이 금지된다. 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예외가 인정된다. 6월에 대법원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CEACR)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ILO 협약 제 135 호(노동조합)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은 ‘필수공익사업’ 근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 항공, 통신, 수도, 기타 공익사업, 병원 등 “공중의 일상 생활, 보건, 신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망라하여 광범위하게 규정된다. 법률에 의해 필수공익사업 노조는 필수유지업무의 50 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사측에서 노조와 협의하여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지정한 인원은 쟁의에 참여할 수 없다.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 일부 특수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으로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 10 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 이후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조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적법하다. 법률은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노동 분쟁”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조건, 임금, 수당, 근로시간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파업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쟁의행위가 법률을 준수한 경우 정부는 전반적으로 노조의 파업권을 보장했다.

법률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그러한 명령을 행했다.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금하고 있다. 노조들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과 교섭 참가자에 대한 까다로운 등록 요건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의 시행을 전반적으로 보장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19,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에 추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명령을 무시하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노조의 합법적인 교섭 요구를 거절 혹은 무시(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19,000 달러) 이하의 벌금)하거나 불법 직장폐쇄(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9,500 달러) 이하의 벌금)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죄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47,5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월에 항소법원은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불법 파업을 감행한 쌍용차 노조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 노조원 139명에게 33억 원(280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노조 연맹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운영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공공연구노동조합 등 사무직 노조를 포함하는 노조 연맹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고 교사의 노조원 자격을 유지시켰다는 이유로 법내 노조 지위를 박탈한 지방법원의 2014년 6월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공개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 교육직 근로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로 인해 교직원 노조가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았다. ILO 의 CEACR 는 이러한 상황이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행위를 금하고 있다.

6 월에 대법원은 8 년의 항소 끝에 불법 체류 근로자도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8 월에는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노조의 설립을 허가했다.

b.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법률은 모든 형태의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을 금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3 월에 정부는 염전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던 장애인 근로자 63 명을 구출했으며 다수의 고용주와 브로커를 기소했다(제 6 절 참조).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범에게 적용되는 형량은 다른 중범죄의 형량과 비례했다. 형법은 모든 유형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인신매매범을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부채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만적인 채용 관행과 임금 체불 등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직면하는 경우가 흔하다. 11 월 현재 정부는 13,793 개 사업장을 조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641 건(2014 년 대비 250 퍼센트 증가)을 적발했으며 그 중 636 건(2014 년 대비 540 퍼센트 증가)은 임금 체불이 관련된 사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여권 압수 사례가 ‘희소’해졌다고 보고했다.

엠네스티인터내셔널에서 발간한 2014/15 보고서는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상태를 포함하여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제 7.d.항 참조)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한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3 년에 실시하고 발표한 대규모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 퍼센트는 법정 근무 시간을 넘어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답했으며 16 퍼센트는 신원 증명 서류를 압수당했다고 답했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c.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 연령

법으로 노동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 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학교까지(약 15 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8 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하려면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미성년자의 시간외 근무를 제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허가가 없는 경우 야간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윤리적 혹은 건강상의 관점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업종의 사업주는 노동법에 따라 18 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 천만 원(19,000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다수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아동이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동원된다는 보고가 있었다(제 6 절 아동 참조).

d. 고용 혹은 직업과 관련된 차별

헌법과 법률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차별이 발생할 경우 당해 조문을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장치는 결여되어 있다. 법률은 성별이나 종교 혹은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경제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생활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관련 법률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발생하고 있다. 특정한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HIV 차별은 여전히 지속됐다(제 6 절 참조).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상황이 개선되고 법적 보호 장치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고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지속됐다.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혹은 출산 직후의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25,4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8,500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 년 한 해 동안 17,000 명의 임신부가 직장을 잃거나 무급 출산 휴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은 고용과 승진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을 5 백만 원(4,76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월에 고용노동부는 차별을 해소할 목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147 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상시 근로자 500 인 이상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동종 사업군 평균의 60 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채용 계획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물품 입찰 적격 심사 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 근로자 1,000 인 이상의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의 수가 다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1 천만 원(9,500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성희롱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약 16,000 곳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관리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방지조치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지시한다.

남녀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했으며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정부 부처 3 퍼센트, 공공기관 2.3~3 퍼센트, 민간 기업 2.3 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이 면제된다. 30~100 인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민간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수만큼 1 인당 710,000~1,166,000 원(595~978 달러)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고용 의무 비율의 50 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4 년 10 월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 장애를 지닌 상당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014 년의 경우 7,807 개 사업장에 3,760 억 원(3 억 1,500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근무시간 조정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편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5~64 세 장애인 139 만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고용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한 사업장의 명단을 언론과 관보에 게재했다.

법률은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급여 수준이 정규직보다 낮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2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 근로자(“파견 근로자”로 불린다)와 임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3 분의 1 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근로 조건에 직면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 2년 정규직 전환 규정이 다수의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제한하도록 유발하고 있으며 2년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현지 언론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들이 처한 지위로 인하여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2014년 9월에 서울중앙지법은 두 건의 독립된 결정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는 1,200 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은 1,247 명의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으로 약 313 억 원(2,620 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 최저 근로 조건

당해 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 원(4.68 달러)이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 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은 4 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

법률은 사업주에게 4 시간 근무제의 경우 30 분, 8 시간 근무제의 경우 1 시간을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2 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8 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특정한 주에 40 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근무제의 시행을 허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주휴(週休)’로도 불리는 주 1 일 휴가 규정 등의 근로 기준이 면제된다.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5 배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률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의 주간 시간외 근무시간을 12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ILO 의 CEACR 은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며 불시에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직업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법률에 의해 근로자는 고용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기준은 농업, 어업, 광업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된다.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 억 원(95,24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예방적으로, 그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8 월 31 일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5,000 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정부는 사고 예방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당해 연도 중에 정부는 지위가 취약한 외국인 임시직 연예홍행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9 월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516,054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다고 보고했다. 고용허가제를 포함하여 일련의 규정들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그 외의 모든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특정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되지만 대부분이 노동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계약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전자·자동차·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다수의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직장을 잃은 경우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당국은 해당자의 취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 또는 건설 근로자 같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주노동자는 전직을 원하는 경우 구인 기업의 명단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전직이 어렵다. 사업주는 구직 근로자의 명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채용을 원하는 근로자에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한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3개월 후에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규정 위반을 예방할 목적으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취업 전 교육을, 전직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적응 교육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3개 언어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및 문화 강좌 프로그램, 쉼터, 무상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콜센터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39곳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무료 법률 자문, 상담, 통역, 자국어 건강검진,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개설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운영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비자가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2014/15년도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보고서는 농업 부문에 고용된 이주노동자가 과도한 근로 시간, 저임금, 불법 하청, 열악한 생활조건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인 농업, 축산업, 어업 부문의 경우 법률이 근무시간, 공휴일, 수당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착취에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라는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임금에서

주거비나 식대를 차감당하는 등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계약 변경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1.55 배였다.

정부는 분기별로 사망자수와 질병자수에 관한 산업재해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8월 현재 정부는 196,237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47 개 지사에서 1,070 명의 산업안전보건담당 근로감독관과 320 명의 일반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보고된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90,909 건이었으며 사망자는 1,850 명이었다. 7월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6 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